

# ‘노후화·공간협소’ 광주 북구청사 증축·확장

### 내달 말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선관위·상수도 북부사업소 이전 예산·접근성 등 활용가치 높아

1985년에 건립된 북구청 청사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증축으로 현재 5개동(청사 본관, 복지 누리동, 보건소, 효죽주차장 건물, 별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선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각 부서가 북구청 교차로를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지면서 민원인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청사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고,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내진 보강을 2035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북구는 장래 행정 수요와 변화에 맞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용역을 맡겼다.

용역은 현부지 내 리모델링·증축·신축 등 방안과 이전 신축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용역이 시작된 직후 북구청 각 청사 건



광주 북구청

물 사이에 위치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 계획이 올해 말로 확정되면서 ‘신청사 이전 건립’ 보다는 현 부지 내 개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존에는 선관위 건물이 북구청 각 건물 사이에 위치해 활용도가 떨어졌으나, 선관위 건물을 북구청 시설로 편입하면 청사 여러 동 건물을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또한 이

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는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임동의 한 부지를 매입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위치한 사업소들의 통합청사로의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수도 검침원들이 통합청사로 흡수될 경우 현장 업무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용봉동에 위치한 북부사업소의 경우 임동과 거

리가 가깝다보니 통합청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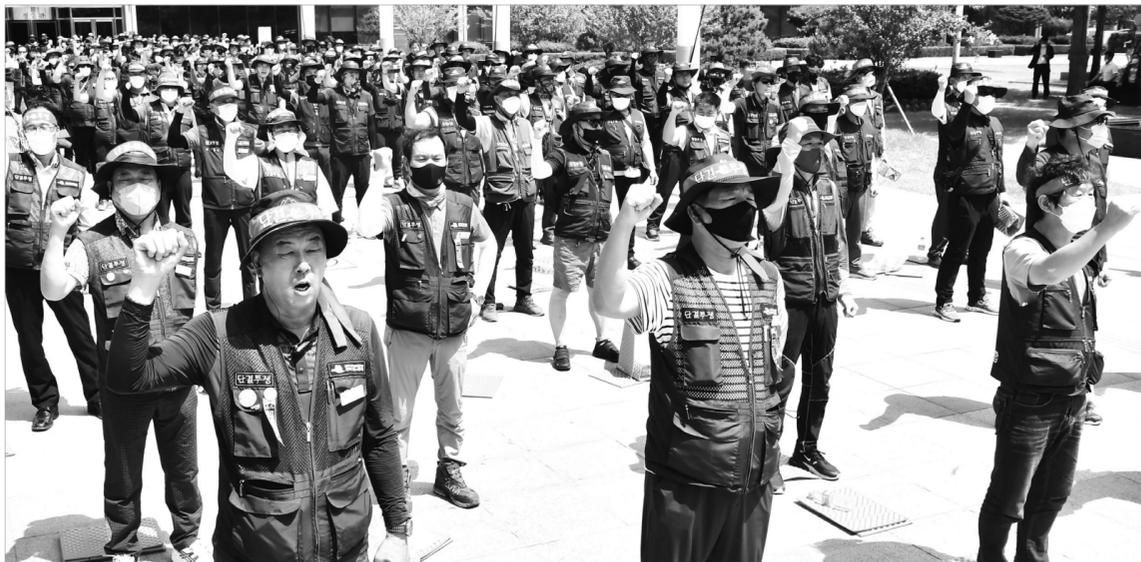
사업소 관계자는 “통합청사와 관련해 현재 건축 기획 단계이다보니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다만, 사업소 이전과 관련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은 이 같은 선관위 등 이전 상황까지 고려해 오는 8월 중 건축기본계획 구상(안), 청사 확장방안 등에 대한 중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북구는 현 청사 부지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 불가피할 때 이전 신축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이전 건립시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약 1,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북구가 청사관리기금으로 확보한 예산은 70억원이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이전 신축보다는 청사 부지 내에 위치한 선관위와 북부사업소를 증축·확장하는 것이 접근성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활용가치가 높다”며 “오는 11월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북구회의와 논의를 거쳐 적절한 청사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국건설노조,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4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공무원 노조 “정부, 인력 축소 계획 철회를”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에 대한 발표를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각종 민원 현장에서 악전고투 중인

광주 지역 조합원 6,000여 명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 노동자 116만 여 명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 정부의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 수가 늘어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 상 순직만 해도 341명으로 연평균 70명에 달한다”며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존 업무에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기자

##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자 사흘째 1천명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0명대를 넘어서며 재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광주 800명, 전남 850명으로 총 1,650명이 신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1,416명(광주 662명, 전남 754명), 12일 1,664명(광주 814명, 전남 850명)에 이어 3일째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다.

광주는 확진자 중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785명이 지역감염이며, 전남은 해외유입 6명, 지역감염 844명이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1명, 위중증 환자는 광주 1명, 전남 2명 발생했다.

앞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6월 초부터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8일, 9일에는 800명대로 올라섰다. /김혜린 기자

##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가동...피해자 ‘불참’ 선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죄 먼저”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 가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는 ‘일본 사죄가 먼저’라며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송 대리인단과 긴급 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할머니는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며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 역시 “일본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

으니 당연히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대위변제’ 방안을 거부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다른 국내외 민간업체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시민모임 측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미쓰비시 측의 진술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 주재로 2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채민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b>20분</b>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b>2분</b>, 장성 IC <b>5분</b></p> <p><b>총 1760평</b>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1) 감평가 (시세) <b>9억</b> 매매가 <b>7억</b> (용4억가)</p> <p>2) 월수익 <b>350만</b>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반모집 -&gt; <b>유치권</b>, 법지, 지분, NPL(전문)</li> <li>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li> <li>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li> </ol> <p>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p> <p>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p><b>010-6670-9800 (062-382-5500)</b></p>		